

한국전쟁의 공식기억과 전쟁기념관*

김형곤**

(동명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한국전쟁에 관한 기억을 보존하고 전달하는 장소인 전쟁기념관은 한국전쟁에 관한 모든 기억을 보존하고 전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기념관은 특정한 관점에서 선별된 기억을 보존하고 전달하려 한다. 이 논문에서는 전쟁기념관의 건립과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쟁기념관 건립사업에는 기념공간 건립과정에서 흔히 생길 수 있는 갈등의 요소가 배제되어 있고, 정부와 군인들이 주도하는 일방적 결정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정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 구체적인 기억의 내용은 한국군과 유엔군의 전쟁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는 정전론(正戰論)의 입장에서 선별된 기억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전쟁기념관이라는 기억전달의 매체가 기억의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이 어떠한지를 살펴 보기 위해 사회호학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전쟁의 기억은 미리 정해진 전시와 관람의 방식에 의해 관람객에게 생생하게 전달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감을 공유하는 통합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한편 전쟁기념관의 공식기억은 국군과 미군에게 희생당한 민간인들의 경험기억을 망각한 기억이다. ‘반공안보의 가치관’에 입각해 선별된 기억만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전쟁기념관의 현재 모습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이제 전쟁기념관은 전쟁의 다양한 기억들이 각각의 차이점들을 인식하고 토론하고 타협하는 장소로 변화해야 한다.

주제어 : 한국전쟁, 전쟁기념관, 공식기억, 집단기억

1. 시작하는 글

서울 용산에 전쟁기념관이 있다. 연간 약 100~15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간다는 전쟁기념관은 우리 민족이 경험했던 전쟁에 대한 체험 현장이자 또한

* 이 논문은 2006학년도 동명대학교 연구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hgkim@tu.ac.kr

살아 있는 역사교육의 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¹⁾ 전쟁기념관은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고, 전사자를 추도하는 상징적 공간으로서의 역할 외에 박물관과 같은 유물 전시, 교육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전쟁기념관은 스스로를 ‘기념관으로서의 박물관(Museum as a Memorial)’이라고 성격 규정하고 있다. 전쟁기념관은 건설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현재 서울 한복판인 용산에 웅장한 자태를 뽐내며 자리하고 있다.

전쟁기념관에는 무엇이 있을까? 전쟁기념관은 “우리 민족이 겪은 온갖 전쟁과 국난 극복의 희생적 발자취를 한데 모아놓는다”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으나 전시물은 한국전쟁과 관련된 것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전시실 중 전쟁역사실은 9백78평에 불과한 반면 한국전쟁실은 1천 8백여 평이다. 나머지 공간은 해외파병실, 국군발전실, 비행기·탱크 등을 전시하는 대형장비실 등이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면적의 차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6·25라고 약칭하는 한국전쟁에 대한 기념물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전쟁실의 전시공간은 ‘배경:남침 - 반격:북진 - 중공군 개입과 전선 교착 - UN참전 - 전시생활실’로 구분되어 한국전쟁의 전 과정을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한국전쟁 당시 남북한의 무기를 비교 전시해놓고, 전선에서의 전투 현장과 후방에서의 전시 생활상을 디오라마(배경을 곁들여 현장감을 살린 모형 전시) 등을 통하여 재현해놓고 있다.

왜 이러한 기념관을 만들게 되었을까? 1988년 청와대 안보보좌관실에서 작성된 「한국동란기념사업계획」에서 제시한 기념관 건립의 목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전후세대의 반공안보관 정립’이다(전쟁기념사업회, 1997, 56 쪽). 구체적으로는 “6·25 전쟁이 발발한 지 4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면서 참전세대들은 점점 감소하고 전후세대들이 대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고도성장과 민주화 과정을 겪으면서 국민들 중에는 한국전쟁을 과거의 역사적 사실로서만 기억하거나 아예 잊고 지내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6·25를 경험하지

1) 전쟁기념관 관람객들이 전쟁기념관 홈페이지(www.warmemo.co.kr) 관람후기에 남겨놓은 글들 중에서 전쟁기념관이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현장으로서 매우 유익했다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못한 세대들 중에는 6·25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는 등 안타까운 사실에 직면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전쟁기념관을 건립한다”며 건립의 목적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전쟁기념관은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에게 한국전쟁을 계속 기억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음을 표방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쟁기념관은 한국전쟁에 대한 어떤 기억을 보존하고 있는가? 전쟁에 대한 기억을 보존하는 장소인 기념관은 전쟁에 대한 모든 기억을 전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기념관은 특정한 관점에서 선별된 기억을 보존하고, 전달하려 한다. 아스만(Assmann, 1999/2003)은 이러한 기억을 실제 역사적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경험적 기억과 구분하여 문화적 기억이라고 부른다. 문화적 기억은 경험기억과 달리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기억이다. 전쟁기념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한국전쟁의 기억이 문화적인 것이라면, 그 기억의 내용은 그것을 결정하는 집단이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쟁기념관의 건립과정을 살펴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건립하게 되었는가를 알아낸다면, 그것을 통해 전쟁기념관이 왜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게 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전쟁기념관의 건립과정과 그 결과로 나타난 기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겠다. 한편 전쟁기념관에 보존된 한국전쟁의 기억은 국민 개개인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전쟁기념관은 한국전쟁의 기억을 전달하는 매체이다. 이 논문에서는 전쟁기념관의 건립과정을 살펴보는 것과 함께 전쟁기념관이라는 기억전달의 매체가 기억의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통해 앞으로 전쟁기념관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까지가 이 논문이 나아갈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2. 기념공간과 공식기억에 관한 이론적 논의

구체적인 연구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기념공간과 공식기억(official

memory)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러한 논의들은 전쟁기념관의 사회적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증거들의 역할을 할 것이다. 후지와라 기이치(藤原歸一, 2001/2003)에 의하면 전쟁의 기억에 관한 최근의 연구에서 두 개의 상반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고 한다. 하나는 억압된 개인적 경험을 생각해내고, 기억을 되돌리려는 시도이다. 여기에서는 잊혀져가는 과거를 드러내며 현재의 의미를 또 다른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주된 일이다. 이러한 시도의 예로, 공식적인 역사 서술에서 소외된 목소리들을 발굴하여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전쟁의 진실을 보여주고자 하는 연구를 들 수 있다. 구술사를 중심으로 한 한국전쟁의 '경험'에 대한 연구들(윤형숙, 2002; 윤택림, 2003; 표인주 외, 2003)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것은 전쟁 체험세대의 경험기억에 대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기념의례와 같은 공식기억에 주목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과거란 현재를 정당화하는 수단이다. 경우에 따라 전통을 조작하고 창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리고 공식기억은 정부가 만드는 픽션의 일종으로 정치적 동기에 의해 조종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전쟁에 관련된 다양한 경험들을 은폐하고 통합하면서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전달되는 공식기억에 대한 연구는 전쟁 미체험 세대가 한국전쟁을 어떻게 기억하는가를 밝히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식기억이란 무엇인가? 김영범(1999)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억이 사건의 종결과 함께 정지되어 고착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들에 대한 다양한 기억들 가운데 어떤 기억들은 용인되고, 다른 기억은 가공되고 변형되면서 때로는 공식기억으로 편입되기도 하고, 어떤 기억은 망각되거나 소멸된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공식기억은 특정한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여러 가지 기억들 중 사회적으로 특권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기억을 말한다. 이러한 공식기억은 전쟁기념관과 같은 기념공간과 어떠한 연관을 지니는가? 이를 설명하기 위해 기념공간과 문화적 기억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전쟁기념관과 같은 기념 공간은 죽은 사람에 대한 추모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한국전쟁과 같은 원초적 사건의 기억을 특정한 공간에 재현해놓은 곳이기도 하다. 기억의 재현 장소로서 기념공간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알박스(Halbwachs, 1992)가 말하는 집단기억(collective memory)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알박스는 기억의 객관성이나 진정성보다 모든 기억이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는 기억의 형성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기제로서 집단 구성원들 간에 배타적이며 구체적으로 행해지는 ‘의사소통’의 측면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집단기억이 실체화되기 위해서는 개념과 이미지가 결합된 특정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집단기억은 공간을 창조함으로써 공고해지고, 이때의 공간이란 단지 상호작용의 장(場)일 뿐 아니라 특정 집단의 정체성이 구체화되는 장소이다. 결국 알박스가 기억이론의 정립을 위해 기여한 바는 기억의 사회귀속성과 공간친화성을 밝혀낸 점이다. 그런데 알박스에게 기억이란 결코 확고하고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 집단기억은 원천적으로 상상적 이미지로 존재하는 공간에 의해 매개된 것으로서 정치적인 편의에 따라 쉽게 조작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알박스는 집단기억이 개인적 기억을 충분히 포섭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았다. 집단기억이 개개 구성원들의 자연발생적인 의사소통과 유리되고 더 이상 그들에게 ‘생생한 기억’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대신하여 보다 조직적으로 기억을 구축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알박스의 저작은 충분한 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 아스만(Assmann, 1999/2003)의 ‘문화적 기억’ 개념이다. 아스만은 기억이 문화적 창조물이라는 가정으로부터 출발한다. 기억이 ‘문화적’이라는 것은 그것이 자연발생적이기보다 인공적으로 구축되기 때문이다. 아스만의 견해에 따르면, 알박스는 집단기억에 ‘의사소통’이라는 사회적 차원만을 부여함으로써 기억이 펼쳐는 시간적 지평을 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했다. 한 사회집단은 자신들이 실제 체험한 근거리 과거를 기억할 때 일상적 소통을 통해 그것을 현재화하고 ‘구체적’ 정체성을 획득하지만, 그것이 ‘생생한 기억’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 사회 내에서 정치적 헤게모니를 쟁취한 집단은 그들의 제한된 기억을 머나먼 ‘기원’에 소급함으로써 그것의 배타성을 은폐하고 그것을 담지한 자기 집단의 보편적 정당성을 찾고자 한다. 그런데 이러한 ‘기원’은 현실 체험과 유리되어 있기에 신화적일

수밖에 없어, 이를 소환하기 위해서는 기록물, 텍스트, 건축물, 도상, 묘비, 사원, 기념비 또는 제의와 축제 등의 매체가 동원된다.²⁾

아스만의 논의를 따르면, 전쟁기념관은 정치적 헤게모니를 쟁취한 정치권력(당시에는 6공화국 정부)이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구축한 ‘문화적 기억’의 매체이다. 한국전쟁의 기억을 독점함으로써 자신들의 보편적 정당성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적 차원에서 기억의 내용을 구성하는 데에는 무엇이 기억되어야 할 것인가를 둘러싼 재현투쟁, 즉 ‘기억의 정치’가 작용한다. 기억의 내용이 결정되면, 그것은 전쟁기념관과 같은 매체를 통해 구체화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쳐 과거에 대한 기억의 내용이 개인 구성원들의 ‘생생한 기억’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억내용이 구성되는 과정과 함께 그 기억이 전달되는 방식에 대한 것까지가 기억 연구에서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문화적 기억을 구축하는 기념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욕망은 기억의 연속성이 위기에 처했다고 인식되는 시기에 생겨나게 된다. 전쟁기념관의 건립 사례에서처럼 특정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체험 기억이 사라져갈 때, 이를 영구히 보존하기 위한 기억 공간의 마련이 요구된다. 전진성(2005, 67~77쪽)은 집단기억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해내기 위해서는 기억, 망각, 정체성의 변증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기억 공간이 보존하고자 하는 집단기억은 체험 기억의 망각을 극복하고, 보존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여기에서의 기억은 망각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망각은 체험에 직접적으로 귀속되는 ‘일차적인’ 기억을 ‘이차적인’ 기억으로 통합시켜내기 위한 구성적 계기가 된다. 과거에 대한 기억은 그것을 조건부로 망각할 수 있음으로써 비로소 완수된다. 체험 그 자체는 매우 비정형적이고, 대부분 파편처럼 분절되어 있어 상호 간에 논리적 연관성도 없다. 따라서 체험에 바탕을 둔 일차적인 기억은 불연속적이다. 이처럼 허술한 기억이 밀도 있게 구성되어 지속적이기 위해서는 일단 그것과 거리를 두는 작업이 요구된다.

2) 알박스의 ‘집단기억’과 아스만의 ‘문화적 기억’에 대한 내용은 전진성(2005, 47~54)의 논의를 참조하였다.

이것이 기억에서 망각이 필요한 이유이다. 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내셔널리즘을 분석한 도미야마 이치로(富山一郎, 1995/2002)에 의하면, ‘희생자 공동체’로서 ‘일본인’이 구성된다고 하는 것은 아시아라고 하는 타자의 망각, 오키나와 전투에서 일본군에 의해 학살된 오키나와 주민들의 증언의 영역에 대한 망각의 결과이다. 이처럼 망각과 기억의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이차적인’ 기억이 공식기억이 된다. 이때 대개의 경우 권력층의 기억만이 공식기억으로 승화되고, 피지배층의 기억이나 여타의 불편한 기억들에 대한 망각이 사회적으로 조직화된다. 기억과 망각의 변증법에 의해 만들어진 공식기억은 국가, 민족과 같은 집단의 보편적인 공동기억이 되고, 이것을 통해 공동체의 정체성을 구성하게 된다. 그렇기에 기억의 내용을 밝히는 것은 망각된 기억의 내용을 복원하는 것과 연결된다.

3. 전쟁기념관과 기억의 정치

기념비적 건축과 조형물 그리고 장소 및 공간에 대한 연구들은 ‘누구에 의해 왜 이러한 것들이 등장하며, 이러한 공간들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며,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하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 장은 ‘누구에 의해, 왜 이러한 것들이 등장하게 되었는가’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건립과정과 그것의 결과물로 나타나게 된 기억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전쟁기념관의 건립과정

(1) 건립 의도

전쟁기념관 건립은 처음부터 6공화국 정권 차원에서 노태우 대통령 임기 중 기념이 될 만한 웅장한 상징물을 짓겠다는 계획하에 추진되었다. 5공화국 시기에 독립기념관, 예술의 전당 등의 건축물을 지었던 것과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군사정권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한 의도를 담고 있다. 그러나 전쟁기념관 건립과정에 대한 공식기록이라 할 수 있는 『전쟁기념관 건립사』(전쟁기념사업회, 1997)는 1988년 6월 22일 노태우 대통령이 국방부 순시에서 관심을 표명한 것이 건립의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한다.³⁾ 이로 인해 그 해 7월초 청와대 안보보좌관실에서 「한국동란기념사업계획」이 작성되었다. 여기에서 밝히고 있는 전쟁기념관 건립의 중요한 목적은 한국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전후 세대의 반공안보관 정립이다. 이는 한국전쟁이 끝난 지 40년 가까이 되면서 전후 세대들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이들이 한국전쟁을 망각하고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망각이 좌익 학생운동의 원인이 되었다는 인식도 있다.

「한국동란기념사업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전쟁기념관 건립의 의도는 1989년 7월 5일에 열린 「전쟁기념관건립후원회」 창립총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쟁기념관건립후원회」는 전쟁기념관 건립 사업에 민간의 참여와 관심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었다. 이 자리에서 당시 국방부장관이던 이상훈은 “최근 사회 일각에서는 체제전복을 꾀하는 좌익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전쟁기념관을 건립하여 올바른 호국정신을 함양시키고자 하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며, 앞으로 이 사업이 젊은 세대들에게 국가의식 함양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나아가 후세에 안보의 성역이 되리라고 믿는다”(같은 책, 56쪽)는 전쟁기념관 건립의 의도를 밝혔다. 이러한 의도는 전쟁기념관의 전시 내용물을 선택하고 구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래서 전쟁기념관은 ‘체제전복을 노리는 좌익세력들의 준동을 막아낼 수 있는 반공안보와 호국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것들로 채워지게 되었다.

(2) 건립 주체의 선정

전쟁기념관 건립 주체의 선정은 군부가 장악하고 있던 1980년대의 정치

3) 전쟁기념관 건립과정에 대한 정보들은 거의 대부분 전쟁기념사업회에서 발간한 『전쟁기념관 건립사』를 참고하였다. 전쟁기념관 건립과정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자료를 참고하기는 어려웠다.

상황을 반영하듯 별다른 논의 없이 대통령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 결과 국방부 소속의 군인들이 건립의 주체가 된다. 보통 기념공간 건립의 주체는 기념사업회 혹은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등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전쟁기념관 건립 과정에서도 건립 주체는 ‘전쟁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된다. 1988년 7월초 청와대 안보보좌관실에서 작성한 『한국동란기념사업계획』에 의거해서 1988년 9월 1일 발족된다. 추진위원회는 국방부에서 구성하였는데, 장군 7명과 장교 39명이 소속되었다. 1989년 2월 3일에 ‘전쟁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전쟁기념사업회’로 이름을 바꾸게 된다.

한편 국방부에서는 ‘전쟁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통제하기 위한 통제기구를 두었는데, 이것이 ‘한국전쟁기념사업통제위원회’이다. 통제위원회는 국방부 제1차관보와 국방부 내 각 부서의 국장들로 구성되었다. 통제위원회는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에 대해 내용 검토를 하고,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였다(같은 책, 79~80쪽). 이처럼 사업의 주체도 사업을 통제하는 곳도 모두 국방부에서 관할하고 관리했다. 이런 이유로 전쟁기념관 건립은 별다른 논의, 논쟁의 과정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었다.

전쟁기념관은 1990년 9월 28일에 기공식을 한 후 1994년 6월 10일에 개관하였다. 건립예산 1천2백46억 원은 국방예산에서 충당되었다. 국방부 내에서 국방예산으로 추진된 전쟁기념관 건립사업은 건립의 주체가 ‘전쟁기념사업회’로 단일화되어 있음으로 해서 기념공간 건립과정에서 흔히 생길 수 있는 갈등의 요소를 배제할 수 있었다. 정부 주도 사업으로 예산 확보도 쉽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규모가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일사불란한 업무 추진으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건립될 수 있었다. 한국의 전쟁기념관 건립의 모델 역할을 했던 호주의 전쟁기념관 건립과정과 비교하면, 한국의 전쟁기념관 건립이 아주 단시간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호주 전쟁기념관은 제1차 세계대전 중인 1916년에 건립의 아이디어가 제시되었고, 이후 호의적 여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쟁 유물 전시회를 1923년부터 1935년까지 개최하고, 1941년에 건물의 기초 형태가 완공되었다(www.awm.gov.au 참조).⁴⁾

(3) 장소의 선정

전쟁기념관 건립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 중 하나는 장소의 선정이다. 『전쟁기념관 건립사』(1997, 126~127쪽)에 의하면, 건립 후보지 선정작업은 1988년 9월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시설 후보지 선정에 고려되었던 요소는 1989년부터 공사 착공이 가능하여야 한다는 점이 최우선적인 것이었으며, 전쟁기념사업과 관련된 역사성을 내재한 위치, 교통이 편리하여 관람이 용이하여야 한다는 점, 주차 사업확장이 가능한 넓은 주변공간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었다. ‘전쟁기념사업회’는 이러한 선정 요소를 갖춘 위치를 도상(圖上)으로 검토하여 수도권 내에서 한 시간 거리에 위치한 16개 지역을 건립 후보지로 선정하였다. 이후 5회에 걸친 공중정찰을 통해 12개 후보지로 범위를 좁혔고, 이어 7회의 지상정찰을 통해 8개 후보지로 또 다시 축소하였다. 건립 후보지는 부지가(敷地價), 철거비, 매입비, 군부대 이전 요소 등의 요인에 의해 재판단되었고, 결국 육군본부 지역, 용산 골프장, 서울대공원 지역, 독립기념관 지역의 4개 지역으로 축소되었다. 이처럼 장소 선정 작업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만큼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다.

1989년 대통령의 국방부 순시 시 ‘각군 본부의 이전부지 활용문제는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 것보다 서울시가 인수하여 공원·기념관·군사박물관 등 시민을 위한 공용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국무총리 주관하에 검토하여 보고할 것’이라는 지시가 있었다(같은 책, 127쪽). 이로 인해 기념관 건립 후보지는 육군본부 지역과 용산 골프장 지역 두 곳으로 압축되었으며, 1989년 2월 21일 구(舊) 육군본부 기존 건물을 완전 철거하고 전쟁기념관을 신축한다는 내용이 대통령에게 건의되고, 이 건의는 지시로 하달되어 결정되었다.

이처럼 전쟁기념관 건립 후보지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선정 작업을 거쳐 6개월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신속하게 결정되었다. 각계각층의

4) 한국의 전쟁기념관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건립되게 되면서 전시물이 대부분 복제품이나 그림, 마네킹들로 채워지게 되었다는 비난을 듣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1993. 6. 7. 한국일보 5면).

여론 수렴과정은 생략됐고, 국방부 내에서 이루어진 몇 번의 검토 작업과 대통령의 지시로 전쟁기념관 건립 후보지가 결정되었다. 전쟁기념관의 장소 선정에 있어서 장소의 역사성은 크게 고려되지 않았고, 빠른 시간 안에 공사가 가능해야 한다는 점과 교통이 편리한 도시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중요시한 것으로 보인다. 전쟁기념관의 장소 선정에 있어서 교통의 편리성이 우선 고려 요소 중의 하나가 되었던 데에는 전쟁기념관 이전에 건립되었던 독립기념관의 사례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독립기념관이 위치한 장소가 너무 외진 곳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기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4) 명칭의 결정

전쟁기념관 건립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던 것은 명칭 문제였다. 이 문제에 있어 가장 큰 논점은 우리말에서 ‘기념(紀念)’이란 용어의 사용이 좋은 일을 오래도록 기억하고자 할 때 쓰인다는 것으로, 전쟁기념관은 ‘전쟁’이 좋아서 기념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국어학자인 진태하(1993)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전쟁 자체를 기념하는 나라는 없으며, ‘기념’이란 말은 ‘결혼기념’, ‘회갑기념’, ‘전승기념’ 등으로 오래 기억하고 싶은 긍정적인 일에 붙여 쓰는 말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영어의 ‘memorial’의 뜻이 우리말의 ‘기념’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즉, 미국의 ‘Memorial Day’는 ‘전사자 추도일’이지 ‘전사자 기념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전쟁기념사업회’의 업무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전쟁기념관 명칭에 대한 제안 모집과 자문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전쟁기념사업회, 82~83쪽). ‘전쟁기념사업회’에서는 1989년 5월 1일에서 13일까지 기념관 명칭 제안을 받는데, 그 대상은 사업회 직원들이었다. 55건의 제안 중 호국기념관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군사박물관이 7건으로 두 번째였다. 전쟁기념관이란 명칭의 제안은 한 건도 없었다. 1990년 6월 13일에는 언론인 13명, 사계학자 6명, 공직자 10명을 대상으로 기념관 명칭 자문을 받았다. 여기에서는 군사박물관이란 명칭의 제안이 전체의 54%를 차지하였다. 전쟁기념관 명칭의 제안자는 전체 8%에 불과했다. 이들 자문단은 최종적으로 ‘군사박물관’이란 명칭

을 제안하면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명칭 제안공모를 실시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곤 건의를 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있었지만, 전쟁기념관의 명칭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기념관’을 유지한다. 전쟁기념관의 명칭에 대한 의견 수렴은 제한된 범위에 한정되었고, 그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군사박물관’과 ‘전쟁기념관’은 그 명칭의 의미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부루마(Buruma, 1994/2002, 286~288쪽)는 박물관과 기념관의 공간적 특성이 다르다고 말한다. 박물관이 분석·토론이 가능한 세속적인 공간이라면, 기념관은 미적 형식이 중요한 종교적·의식(儀式)적 공간이라는 것이다. 진실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갈등, 논쟁, 해석, 그리고 재해석, 끝없는 토론이 있어야 하는데, ‘유물’과 ‘성역’, 희생에 대한 찬미가 있는 종교적 색채가 강한 공간인 기념관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일본 야스쿠니 신사는 전쟁 희생자들의 충성심, 희생정신 등이 찬미되는 종교적 색채가 강한 전쟁기념관이다. 이곳에서 침략전쟁의 진실은 묻히고, 전쟁 희생자들의 죽음에 대한 찬미만이 남게 된다. 논쟁은 있을 수 없다. 결국 ‘전쟁기념관’이란 명칭의 채택은 전쟁의 진실을 밝히는 논쟁과 갈등의 장소가 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대신 반공안보 논리에 입각한 한국전쟁의 공식기억이 종교적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의도를 담은 것이 된다.

(5) 건립과정의 정치학

군사정권하에서 추진된 전쟁기념관 건립은 초기 건립과정에서 아무런 이견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 정치적 논쟁의 과정은 생략되었다. 또한 대개의 기념관, 기념물의 건립예산이 모금에 의해 마련되는데 비해, 전쟁기념관은 국방예산으로 충당되어 예산문제도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전쟁기념관의 건립과정은 매우 순탄하게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건립이 진행되는 중에 정권이 바뀌면서 뒤늦게 건립 반대의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 ‘전쟁기념사업회’는 서울 수복일인 1990년 9월 28일에 전쟁기념관 기공식 행사를 하였고, 1992년 5월을 최초 준공예정 시기로 잡았다가

1993년 연말로 완공 목표시기를 연기하게 된다. 그러나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전쟁기념관 사업이 의견수렴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비판하는 부정적 의견들이 쏟아져 나와 전쟁기념관 개관이 다시 한 번 연기된다. 1993년 6월 들어 당시 여당인 민자당에서 전쟁기념관 건립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언론에서도 일제히 전쟁기념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전쟁기념관 세울 돈으로 어린이를 위한 과학관 10개를 만들 수 있다”(1993. 6. 11. 조선일보 1면), “권위주의에 젖은 군사정부들이 대규모 역사와 기념비적인 조형과 건물을 경쟁적으로 만들어 폐해가 컸다”(1993. 6. 9. 한국일보 3면), “우리 역사상 치욕의 한 부분인 동족상잔의 전쟁을 기념하는 박물관을 서울 한복판에 세울 필요가 있을까”(1993. 6. 8. 동아일보 1면) 등의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언론은 막대한 국방예산을 들여 서울 한복판에 세워지는 전쟁기념관이 완공에 이르도록 여론수렴과정 한 번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다 1993년 6월 17일에 김영삼 대통령이 전쟁기념관이 이미 완공단계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쟁기념관을 국립박물관으로 전용하겠다는 민자당의 방침을 백지화시켰다. 이후 전쟁기념관 건립에 대한 논쟁은 사라졌다. 이런 과정을 거쳐 1994년 6월 10일에 개관 기념식을 갖게 된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기념관은 기공식 이후 채 4년이 지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에 건립을 완료하게 된다. 그리고 전쟁기념관에 전시되는 전쟁의 내용들도 최초의 의도대로 반공안보의 논리에 부합되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들이 되었다.

2) 기억의 내용

전쟁기념관의 전시실에서 재현하는 한국전쟁의 기억은, 별다른 논의의 과정 없이, 최초에 전쟁기념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했던 의도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완공을 앞두고 정권이 바뀌면서 부정적 의견도 있었지만, 완공 단계에 다다른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전시내용을 결정하는 데 있어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전쟁기념관 한국전쟁실이 재현하는 한국전쟁의 기억 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1) ‘전쟁에 직접 관련된 것’ 중심

전쟁기념관의 한국전쟁실에 있는 한국전쟁 관련 전시물들은 거의 직접 전쟁과 관련이 있는 전투 현장의 병사들, 무기들, 군사 전략, 전투현장의 재현 등에 관한 것이다. 전시(戰時)에 민간인들이 겪었던 어려운 생활상을 재현한 전시물도 있지만, 이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전쟁실의 전시공간 구분에서 보는 것처럼 ‘전시(戰時) 생활’을 보여주는 공간을 제외하면, 전시의 중심이 되는 것은 거의가 직접 전쟁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전쟁기념관의 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집단은 ‘전쟁기념사업회’의 전시(展示)자문위원들이었다. 전시자문위원은 군사전문가 12명과 전시·조명·영상·군제사(軍制史)·전시(戰史)·고대무기·실내건축·예술·사학·고대복식 등의 각 부문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1989년 10월 17일에 열린 제3차 전시자문위원회에서 한국전쟁실의 전시 방침을 논의하면서 “6·25 전쟁은 초기 3개월이 가장 중요한 전투였으므로 이때의 전투 장면을 상세히 전시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전쟁기념사업회, 122쪽).

이러한 의견으로 볼 때, 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한국전쟁 초기에 있었던 전투 장면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밀고 밀리는 전투의 과정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것이다. 일본 전쟁기념관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야스쿠니신사에서는 한국의 전쟁기념관과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 일본 야스쿠니신사의 쇼와관(昭和館)은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전쟁, 대동아전쟁 등을 보여주는 전쟁박물관이지만, 전쟁을 긍정하는 듯한 전시는 전혀 없다. 전장의 병사와 군사전략 등 전쟁행위에 직접 관계된 전시는 모두 배제되어 있다. 대신 전시(戰時) 일본인의 생활소품 등을 전시하고 있다(藤原歸一, 2001/2003, 110~112쪽). 공습이라는 형태로 전쟁의 공포를 경험한 일본 일반시민의 전쟁 경험을 전시하면서, 일본인의 전쟁 피해자의식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군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과는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체험실에서 실시하는 전쟁의 체험도 전쟁 중에 힘들었을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 대한 체험이 아니라, 전쟁 당시의 전투 현장에 대한 체험이다. 관람객들 대부분이 군인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가상의 전쟁체험을 전투현장 체험으로 한정시키고 있다.

(2) ‘전쟁의 책임’ 강조

한국전쟁실의 전시 기본방침은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지켜온 역사상 최대의 국난극복이었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참혹한 전쟁이 북한 김일성의 남침으로 비롯되었음을 알리고’, ‘남북통일의 직전까지 갔었던 전쟁의 승리감을 묘사하여 전력 증강의 필요성을 주지시키고’, ‘유엔군의 활약과 업적을 부각시키는’ 것이다(전쟁기념사업회, 375쪽). 북한의 불법 남침과 이를 격퇴한 한국군과 유엔군의 승리감과 활약 등을 강조하는 전시 기본방침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전쟁기념관 한국전쟁실에는 북한 공산주의 세력이라는 명확한 전쟁의 책임자가 나타나 있다.

전쟁을 일으켰던 전쟁의 책임 국가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는 호주의 전쟁기념관과 달리,⁵⁾ 한국의 전쟁기념관은 전쟁 책임국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방침은 ‘전쟁기념사업회’ 정책자문위원회의 회의 과정에서 나타난다. 정책자문위원은 군 원로 24명과 사회 원로 7명으로 구성되었다. 1989년 11월 30일에 열린 제6차 정책자문회의에서 “배경실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배경실만 보면 6·25 전쟁의 전체를 알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같은 책, 323~327쪽). 여기에서 배경실은 불행한 전쟁의 책임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 주력하는 공간이다. 소련의 사주를 받은 북한의 불법 남침이 불행한

5) 호주 전쟁기념관의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제기한 찰스 빈(Charles Bean)은 전쟁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전시 원칙의 리스트를 만들었다. 거기에는 ‘전쟁의 찬양, 승리의 자랑’을 피하도록 하고, ‘증오가 영속화되는 것’을 피해야 할 것 등의 원칙이 있다. 그래서 호주의 전쟁기념관에서는 이전에 적이었던 국가를 매우 관대하게 대하고 있다(www.awm.gov.au 참조).

전쟁의 원인이었다는 사실의 강조는, 전쟁을 일으킨 악의 세력에 맞서 싸우는 전쟁행위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어진다.

(3) 전쟁의 정당화

전쟁기념관의 전시물들은 한국전쟁을 어떤 전쟁으로 기억하게 하는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먼저 전쟁을 평가하는 두 가지 견해를 소개하고자 한다. 후지와라 기이치(藤原歸一, 2001/2003)는 전쟁에 관한 시대별, 국가별 논의들을 살펴보면, 그 논의들을 크게 정전론(正戰論)과 반전론(反戰論)으로 나누어 일반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쟁을 시작하는 국가가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그 국가를 위협하고 억제해야 평화가 성립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것이 전쟁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전론의 견해다. 다른 한편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수단이 있는 한 평화가 올 수 없다고 생각하면, 무기를 없애고 궁극적으로 전쟁이 없어야 평화가 실현될 것이다. 이것이 모든 전쟁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반전론의 견해이다. 후지와라 기이치는 정전론과 반전론의 견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곳으로 미국 워싱턴의 홀로코스트박물관과 일본 히로시마의 평화기념자료관을 꼽고 있다. 홀로코스트박물관은 살인자, 파괴자의 책임을 물으면서, 부당한 현실에 저항하는 전쟁은 정당한 것이라는 기억을 전하고 있다.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은 전쟁을 일으킨 책임과 원폭을 투하한 책임을 묻지 않고, 전쟁이라는 행위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무기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는 반전론의 기억을 전하고 있다.

전쟁기념관 한국전쟁실에서 전달하는 한국전쟁의 기억은 정전론의 입장에서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련의 사주를 받은 북한 공산당의 침입, 그로 인한 한민족의 고통, 불굴의 의지로 공산주의 세력의 침입을 물리친 한국군과 유엔군의 전쟁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쟁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를 명확하게 밝히고, 적에 대항한 한국군·유엔군의 전쟁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도 공산주의 세력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전쟁 행위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래서 한국군

의 전력 증강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볼 수 있다.

(4) 망각된 기억

앞의 이론적 논의에서 기억은 망각의 결과라고 하였다. 정전론에 입각한 전쟁의 기억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공식기억에 포함되지 못한 한국전쟁에 관한 수많은 기억들이 망각되었다. 전쟁기념관에서 전달하는 한국전쟁의 기억은 한국군과 미군의 전쟁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을 망각한 기억이다. 김동춘(2000)은 공식적인 전쟁 해석과 배치되어 공적인 영역에 포함되지 못한 체험 기억을 ‘압제받는 체험’, ‘부인된 기억’이라고 말한다. 전쟁기념관에는 국군과 경찰, 미군의 민간인 학살, 그들이 민간인들에게 끼친 피해들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또 국군과 경찰, 미군에 의해 희생당한 수많은 사람들의 가족들이 ‘빨갱이’ 가족으로 낙인찍혀 온갖 불이익을 받으면서 살아온 체험 기억들도 전쟁기념관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전쟁기념관의 한국전쟁 기억은 한국군, 유엔군의 전쟁행위를 정당화하면서, 이에 배치되는 개인적 경험 기억들과 전쟁의 진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전쟁기념관이 냉전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망각된 전쟁의 기억들을 복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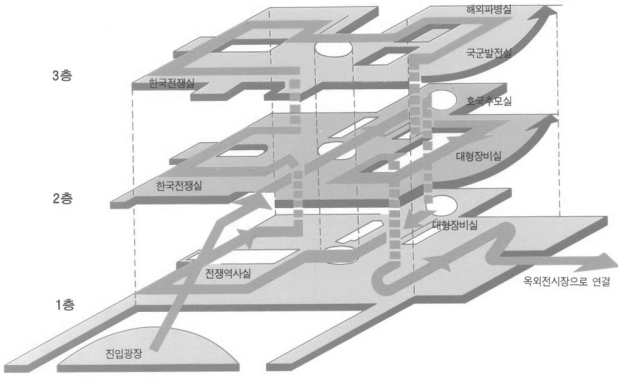
4. 기억 전달매체로서의 전쟁기념관에 대한 사회기호학적 분석

전쟁기념관의 중심은 한국전쟁에 대한 것이다. 건립 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전쟁기념관 건립의 의도는 한국전쟁의 기억이 망각되지 않도록 기억을 보존해서 전후 세대의 반공안보관 확립에 기여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의도는 자동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전쟁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는 여러 전시물들과 미리 정해진 전시와 관람의 방식에 의해 의도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쟁기념관이 한국전쟁의 기억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쟁기념관에 대한 사회기호학적 분석은 전시관 공간과 접합된 세부 요소들과 전시방식들이 어떻게 기능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이뤄질 수 있다. 이것은 두 가지로 구분하여 이루어진다. 첫째는 전쟁기념관 건물과 전시실 내 시각요소들의 모티프(motif)가 가지는 의미를 분석하는 계열체 분석이다. 둘째는 전쟁기념관의 각각 요소들의 연결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는가를 분석하는 통합체 분석이다. 계열체(paradigm)와 통합체(syntagm)는 모든 기호체를 조직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다(김경용, 1994, 94~101쪽). 계열체는 어떤 공통성을 지닌 기호 한 벌을 가리킨다.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마다, 우리는 계열체들로부터 어떤 특정 기호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 선택행위가 의미를 일으킨다. 통합체란 계열체에서 선택한 기호들을 조합하여 이루어진 기호 복합체를 지칭한다. 계열체의 주개념이 ‘선택’임에 비해서, 통합체의 주개념은 ‘조합’이다. 출근길에 입고 나서는 옷차림은 통합체이다. 양복의 계열체에서 고른 특정한 양복, 넥타이의 계열체에서 고른 특정한 넥타이 등이 조합되어 있는 통합체이다. 이처럼 모든 기호는 통합체적이고 계열체적인 축에 의해 구조화된다. 사회기호학적 분석에 앞서 우선 전쟁기념관의 대략적인 공간 구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전쟁기념관 전시관의 공간 구성

전쟁기념관은 옥내 전시공간과 옥외 전시공간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전시자료는 총 9,000여점에 이른다. 1만 9백여 평의 옥내전시실은 호국추모실, 전쟁역사실, 한국전쟁실, 해외파병실, 국군발전실, 대형장비실 등 6개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삼국시대부터 현대까지의 각종 전쟁자료와 무기, 군복 그리고 전투 현장 등이 실물·디오라마·복제품·기록화·영상 등의 다양한 전시기법에 따라 입체적으로 전시되어 있다. 전시실 배치와 관람객의 동선은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전시관의 입구와 출구를 다르게 함으로써 관람객들이 일단 관람을 시작하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전시실을 다 통과해서 밖에 있는 옥외전시장으로 빠져나오게 하고 있다.



<그림 1> 전시실 배치 및 동선(출처: 『전쟁기념관 도록』(전쟁기념관, 1996))

전쟁기념관의 여러 전시실 중 이 논문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국전쟁실은 ‘배경:남침, 반격:북진, 중공군 개입과 전선 교착, UN 참전, 전시생활실, 전장체험실’로 구분되어 있다. 한국전쟁실은 전쟁기념관 2층과 3층에 걸쳐 있는데, 2층에 있는 ‘배경:남침, 반격:북진, 중공군 개입과 전선 교착’을 순서대로 거쳐 3층에 있는 ‘UN 참전, 전시생활실, 전장체험실’을 둘러볼 수 있게 되어 있다. 각 전시공간의 전시 목적은 다음 <표 1>과 같다.

2) 계열체 분석

전쟁기념관은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고, 전사자를 추도하기 위한 공간이다. 전쟁기념관 건물 전체를 하나의 기호로 볼 때, 기호의 내용은 전쟁기념관 건물의 건축방향으로 삼고 있는 ‘상징성과 권위성의 표출’이다. 전쟁기념관은 경건함과 장엄함을 주기 위해 정면 축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적 구성을 하고 있다. 독일 제3제국의 대건조물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전쟁기념사업회, 1997, 227쪽)에도 불구하고 상징성과 권위성을 건축의 중요한 모티프로 삼고 있다. 전쟁기념관은 전형적인 모던 건축의 특징을 구비하고 있다. 모더니즘은 인간

<표 1> 한국전쟁실 각 전시공간의 전시 목적 및 주제

전시 공간	전시 목적		전시 주제
배경:남침	6.25 전쟁 발발배경과 경과를 일목요연하게 전시		남북한 정부 수립 및 창설과정, 남북한 복식·전투장비 비교, 남침 상징, 개전 초기 지상전투, 해·공군 전투, 스미스부대 참전, 의료지원, 학도병·유격대 활동
반격:북진	북진통일을 위한 국군의 의지와 자유평화 수호를 위한 유엔 참전국의 혈맹적 우의 전시		인천상륙작전, 서울 수복, 민사심리, 38선 돌파 및 북진작전, 평양 탈환
중공군 개입과 전선 교착	중공군 개입	혹심한 추위 속에서 중공군의 인해전술에 밀려 철수작전을 전개한 당시 국군과 유엔군의 활약상 전시	중공군의 장비와 복식, 인해전술, 철수·재반격작전, 용문산전투
	전선 교착	6.25전쟁은 종전이 아닌 휴전이라는 사실을 중심으로 전시	고지 쟁탈전, 방어전투 활동, 인사·군수 지원, 포병활동, 도솔산 전투, 반공유격대, 해·공군·경찰 전투, 휴전회담, 포로 교환
UN 참전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침략한 북한을 응징하기 위해 유엔의 기치 아래 참전한 21개국의 활동 소개		유엔기념공원(묘지) 재현, 유엔군 참전 배경, 전투부대·의료지원국, 참전 16개국 복식, 역대 유엔군사령관 존영
전시생활실	처참했던 전쟁 당시의 상황과 공산 집단의 잔학상 표출		전쟁의 참화, 전시 주거생활, 피난행렬, 전시교육, 은거생활, 노무단 활동, 종군 기자 활동
전장체험실	6.25전쟁 당시의 야간전투 상황 재연		영상·음향·진동·포연·조명·화약냄새 등의 특수효과에 의해 전쟁상황 체험

출처: 전쟁기념관 홈페이지(www.warmemo.co.kr) 자료 재구성.

에게서 감성, 자유와 상상력을 배제시킴으로써 이상적인 미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모던 건축은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기능의 합리성과 형태의 순수성을 추구한다. 또한 애매함이라든가 다의적 해석 가능성을 배제하며, 장식을 최소화하는 엄격함을 지니고 있다. 단순성을 이상화하는 건축은 획일적 형태의 건물형태를 지향하며 따라서 주어진 환경 어디에나 세워질 수 있는 입방체 모양을 하고 있다. 전쟁기념관은 완벽한 사각 대지에 완벽한 좌우대칭의 엄격한 질서와 균형비례를 갖추고 있다(<그림 2> 참조). 모더니



<그림 2> 전쟁기념관 전경

즘을 토대로 한 전쟁기념관의 건축양식은 모던 건축의 지향을 통해 반추해 본다면, 관람객들이 자신의 경험과 문화를 배경으로 전쟁에 대한 개념을 재구성할 기회를 철저히 박탈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쟁기념관에는 전쟁에 관련된 다양한 전시물품들을 전시하는 전시실이 있다. 전시실의 기본적인 전시방향은 ‘국방이 약화되었을 때는 국가가 존망의 기로에 선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여 국민들에게 확고한 국가관의 정립과 애국심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쟁기념관의 여러 전시실 중 한국전쟁실은 ‘한국전쟁을 실전처럼 느낄 수 있도록 각 관마다 중요 전투를 입체적으로 묘사하도록 하며, 전쟁의 승리감이 잘 묘사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지침으로 삼고 있다(같은 책, 299쪽). 한국전쟁실의 전시공간에는 각기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 ‘반격:북진’실은 “북진통일을 위한 국군의 의지와 자유평화 수호를 위한 유엔 참전국의 혈맹적 우의를 보여주하고자” 하는 공간이다. ‘중공군 개입과 전선 교착’실은 “혹심한 추위 속에서 중공군의 인해전술에 밀려 철수작전을 전개한 당시 국군과 유엔군의 활약상을 보여주려고” 하는 공간이다. 전시물들은 이러한 메시지에 맞춰 선택된 것들이다. 이러한 것은 다른 전시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한국전쟁실에는 특별한 전시의 방법이 있다. 그것은 지향하는 메시지와 일치하는 대표적인 전시물을 선정하여 중점 전시하는 방법이다. 이런 전시방법을 통해 한국전쟁에 관련된 다양한



<그림 3> 인천상륙작전 디오라마



<그림 4> 중앙청 태극기 게양 디오라마

이야기들 중 전쟁을 정당화하면서 반공안보의 논리에 부합하는 메시지들만이 전달되게 된다.

전쟁기념관에서 전쟁의 현실감을 높이기 위해 다양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디오라마(diorama)이다. 각 전시실에는 전쟁의 중요한 장면들을 재현한 디오라마들이 있다. 디오라마는 하나의 사실 또는 주제의 시간 상황을 고정시켜 연출한 것으로, 전시물의 입체감과 현장성을 표현하기 위한 기법이다. 원근법에 입각해 배경그림을 그리고, 그 앞에 주제가 되는 중심 오브제를 모형으로 전시하는 것이다. 이들은 한정된 쇼윈도 안에 전시되며, 시각은 정면 방향에 한정된다. 전쟁기념관에서는 전쟁을 현실로 느끼도록 하기 위해 딱딱한 역사 자료나 오래된 유품, 군사 전략 등으로 전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입체감과 현장감을 살린 디오라마를 통해 쉽게 설명하고 있다. 한국 전쟁실의 디오라마들은 대체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한국전쟁 사진을 참고해서 제작되어 현실감을 높이고 있다(<그림 3>, <그림 4> 참조). 엄숙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약간 어둡게 맞춰져 있는 전시실 조명 밑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디오라마는 관람객의 시선을 잡아끄는 장치가 된다.

전쟁기념관 건물과 전시실의 전시물들, 그리고 전쟁을 재현한 디오라마들은 전쟁의 현실감을 높이면서 반공안보의 내러티브를 구성하기 위한 부분 요소들이 된다. 이들이 합쳐져서 전쟁기념관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전쟁의

기억을 구성하게 된다. 이것은 통합체 분석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나타날 것이다.

3) 통합체 분석

통합체 차원에서는 전쟁기념관 전시관 내부의 공간배치와 전시방식 등이 관련된다. 전쟁기념관 전시관 내부의 공간배치와 전시방식은 모두 관람객으로 하여금 반공안보 정신과 국가관의 정립, 애국심 함양을 목표로 하는 전시물을 관람하게 함으로써,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목적의 달성 여부는 전시관 내의 관람환경과 그 속에서 일어나는 관람자의 관람행위에 달려 있다. 전시실의 공간 배치와 전시방식의 도구적인 기능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쟁을 구체적으로 느끼고 생각하게끔 하는가와 관련된다.

전쟁기념관에는 몇 가지 특징적인 공간배치 및 전시방식들이 통합체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관람객들의 위치를 통제하는 공간배치를 들 수 있다. 기념관 내의 전시실들은 관람객들의 공간과 위치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는 강력한 통제장치를 갖추고 있다. 처음부터 관람객들은 전시실 내의 자신의 위치에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된다. 처음으로 관람하는 장소인 긴 직사각형의 통로와 원형의 전시실로 구성된 ‘호국추모실’을 돌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또 다른 복도를 만나게 된다. 계속적으로 작은 원형의 동선 배치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이들이 다시 커다란 나선을 만든다. 작은 원형의 관람동선의 반복으로 관람객들은 자신이 전시실의 어디쯤에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되어버린다. 자신의 위치를 잃더라도 관람은 계속될 수 있다. 왜냐하면 전시실의 바닥과 벽 곳곳에 다음으로 이동할 장소를 나타내는 화살표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관람객들은 자신의 위치를 통제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화살표가 지시하는 방향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기념관 전체의 관람코스를 관람 전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출구를 찾을 수 없고 따라서 도중에 자의로 관람을 포기할 수도 없다. 처음에는 관람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던 화살표가 이제는 관람객의 위치를 강제적으로 결정하고 통제하는 억압기제가 된다. 한국전쟁실과 해외파병실을 거치고 난 후 화살표가 안내하는 곳은 ‘국군발전실’이다. 여기서는 전쟁 이후의 평화를 보장하고 안전을 수호하는 데 필요한 군사화, 첨단기술화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관람객들은 전쟁의 공포와 무기력함을 경험하고 난 후 비로소 안도감을 느끼고, 전쟁을 이끄는 국가권력이 결국에는 전쟁 이전보다 훨씬 안정되고 평화로운 세상을 건설한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

두 번째는 화살표를 따라 이어지는 관람방식에 의해 각 전시실의 디오라마들을 연결시켜 볼 수 있는 전시방식이다. 근대 시각매체의 역사에서 볼 수 있는 디오라마는 사진의 발명가인 다게르(Daguerre)에 의해 발명된 시각 장치이다. 관객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고, 그림이 이동하면서, 움직이는 현실을 재현하는 장치이다. 디오라마는 시각 주체가 원근법의 주체와는 달리 자신의 자율성을 상실하고 기계의 시각에 종속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치이다(주은우, 2003, 410~412쪽).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그림에 시각이 종속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전쟁기념관의 디오라마는 본래 의미의 디오라마와는 다른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개별 디오라마들은 연결되어 있지 않고, 각 전시관에서 다른 전쟁 유물들과 함께 전시되고 있다. 그렇지만 관람객들이 정해진 화살표를 따라 관람하도록 강제되는 상황에서 디오라마들은 연결된다. 강제적으로 정해진 순서에 맞춰 디오라마를 바라보게 되는 관람객들은 시각 주체로서 자신의 시각적 통제력과 자율성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디오라마를 통해 구성된 전쟁의 기억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셋째는 미리 제시된 순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관람방식에 의해 관람객에게 전쟁은 한편의 극적인 이야기로 전달된다는 점이다. 원래 전쟁에는 한편의 극적인 이야기로 집약될 수 없는 다양한 사건들이 있다. 개별 사건들은 서로 모순되는 의미를 가졌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전쟁기념관에서는 전쟁의 다양한 개별 사건을 나열하는 방법을 지양한다. “한국전쟁이 소련 및 중공의 사주를 받은 김일성 일당이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 위해 도발한 반민족적인 만행이

있음을 알리고, …… 주요 전투인 인천상륙작전, 서울 수복작전, 평양 탈환작전을 통하여 한·만 국경까지 진격할 수 있었던 전쟁의 승리감을 묘사”(전쟁기념사업회, 1997, 375쪽)하는 한 편의 극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고자 한다. ‘전쟁기념사업회’의 제6차 정책자문회의에서 “극적인 표현을 하여 6·25 미체험자인 젊은 세대에게 전사(戰史)에 대한 흥미를 유발토록 전시함이 바람직하다”(같은 책, 327쪽)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전쟁기념관이 전달하는 한국전쟁의 공식 기억이 젊은 세대에게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전달방법에 대한 모색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생각해낸 것 중 하나가 극적인 내러티브를 가진 이야기로 한국전쟁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쟁의 승리감을 묘사하는 극적인 내러티브에 포함되지 못하는 개별 사건은 전쟁의 기억에서 배제되어버린다.

6공화국 정부가 전쟁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내세운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전후 세대의 반공안보관 정립’이다. 전쟁기념관 관람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한민족의 일원으로서 정체감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쟁기념관 관람이 관람객에게, 북한 공산군의 불법 남침이라는 고난의 역사 속에서 자유를 지켜온 조국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감동의 순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전쟁기념관의 전시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 반공안보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구성되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전시’는 단순히 물건 또는 자료들을 나열하거나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의 메시지를 분명히 표현하고자 하는 ‘전략적 장치’를 의미한다(최석영, 2004). 전쟁기념관 홈페이지의 ‘관람후기’나 전쟁기념관 관련 블로그를 보면 전쟁기념관이 전달하고자 하는 감동의 메시지는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전달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순국선열들에 대한 고마움에 가슴이 뭉클했다’,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장소였다’, ‘애국심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모두 우리나라를 지키는 애국자가 됩시다’ 등의 관람후기를 많이 접할 수 있다.

5. 마치는 글

이 논문에서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거대한 기념공간인 전쟁기념관이 한국 전쟁에 대한 어떤 기억을 보존하고 계승시키려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래서 먼저 전쟁기념관의 건립과정을 살펴보았다. 기념공간의 건립과정에는 여러 가지 사회·정치적 고려와 의도가 개입하게 된다. 이것은 기념공간의 공간적 성격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전쟁기념관 건립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건립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는 국방부 소속의 군인들로 구성된다. 전쟁기념관 건립예산은 국방예산으로 충당되었다. 장소와 명칭의 결정은 국민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전쟁기념관 건립 사업에는 기념공간 건립과정에서 흔히 생길 수 있는 갈등의 요소가 배제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전쟁기념관은 규모의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일사불란한 업무 추진으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건립을 완료할 수 있었다. 전쟁기념관 건립을 계획하면서 정부에서 제시한 건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전후 세대의 반공안보관 정립’이다. 일사불란한 건립과정을 거치면서 최초 계획했던 건립 의도는 별다른 이견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전쟁기념관의 전시물들도 이러한 의도에 맞춰 선별되었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건립과정을 살펴본 다음, 그 결과로 존재하게 된, 전쟁기념관이 전달하고 있는 한국전쟁에 관한 기억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전쟁기념관 한국전쟁실에 있는 전시물들은 거의가 직접 전쟁과 관련이 있는 전투 현장의 병사들, 무기들, 군사 전략, 전투 현장의 재현 등에 관한 것이다. 가상의 전투 상황을 재연한 전장체험실도 있어, 전쟁의 중심을 전장의 군인들 위주로 생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쟁기념관에서는 전쟁을 일으킨 책임 국가가 어디인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고, ‘북한 공산주의 세력의 불법 남침’이 불행한 전쟁의 원인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전쟁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힌다는 것은, 전쟁을 일으킨 악의 세력에 맞서 싸우는 전쟁행위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어진다. 그래서 전쟁기념관은 한국군과 유엔군의 전쟁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는 정전론(正戰論)의 입장에서 선별된 한국전쟁의 기억을 전달하고 있

다.

한편 전쟁기념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한국전쟁의 기억은 미리 정해진 전시와 관람의 방식에 의해 관람객에게 전달된다. 전시와 관람방식에 대한 사회기호학적 분석을 통해, 여기에서 한국전쟁은 한 편의 극적인 내러티브를 가진 이야기로 전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쟁기념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한국전쟁의 공식기억을 젊은 세대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마련한 또 다른 방법 중의 하나는 디오라마를 이용한 전쟁 상황의 연출이다. 통제된 경로를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관람 방식도 전쟁기념관 전시의 특징적인 부분이다. 이러한 관람방식을 통해 관람객들은 전쟁기념관이 전달하는 한국전쟁의 문화적 기억을 현재에도 살아있는 ‘생생한 기억’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전쟁기념관 관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동의 기억을 공유하는 통합적인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전쟁기념관 홈페이지 관람후기에는 ‘전쟁기념관을 관람하면서 조국의 소중함을 느꼈다’는 내용의 글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체감의 공유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동질성을 느끼게 하는 통합적 역할을 담당하지만, 한편으로는 배제적인 역할도 담당한다. 전쟁기념관에서 전달하는 한국전쟁의 공식기억은 ‘반공안보의 가치관’에 입각하여 선별된 문화적 기억이다. 이것은 여기에 포함될 수 없는 개별 경험기억들을 망각한 결과이다. 전쟁에서 기억되어야 할 것은 전쟁의 승리와 군인들의 활약, 희생들뿐만 아니라 총력전 체제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민간인들의 무수한 희생도 있다. 남한의 민간인들 중에는 국군, 미군, 경찰에 의해 희생당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이들의 경험은 전쟁기념관의 한국전쟁 공식기억에서 삭제되어 있다.

이제 한국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겪어야 했던 과거의 불행한 역사적 사건인 한국전쟁은 찬미하고 기념하기 위한 대상이 아니라 반성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국군과 미군의 전쟁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삭제되고 망각된 개별 경험기억들이 전쟁기념관의 공식기억 속에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 전쟁기념관은 전쟁의 진실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고 논쟁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김영범(1998)은 현대인의 자기 정체성을 국민/민족의 틀 속에서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현대인의 자기 정체성은 경제적 세계화와 초국가적인 정치적 통합에 의해 급속히 변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념 의례와 기념공간에 대한 국가의 강제와 독점은 점점 약화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기념관도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아야 한다. ‘반공안보의 가치관’에 입각해 선별된 기억만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전쟁기념관의 현재 모습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전쟁기념관은 화석처럼 굳어버린 냉전 시대의 한국전쟁 공식기억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억들이 각각의 차이점들을 인식하고 토론하고 타협하는 장소로 변화해야 한다. 최근 들어 군사박물관이나 역사박물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전시물도 그 성격에 맞도록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데(2003. 6. 25. 한겨레 4면/2003. 6. 2. 문화일보 7면), 이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쟁기념관이 개관한 후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Ⅰ 참고문헌

- 김경용 (1994).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민음사.
- 김동춘 (2000). 『전쟁과 사회』. 서울: 돌베개.
- 김영범 (1998). 집합기억의 사회사적 지평과 동학. 『사회사 연구의 이론과 실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57~211.
- _____ (1999). 집단학살과 집합기억 - 그 역사화를 위하여. 『냉전시대 동아시아 양민학살의 역사』. 제주 4·3연구소 창립 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 윤택림 (2003). 『인류학자의 과거 여행 - 한 빨갱이 마을의 역사를 찾아서』. 서울: 역사비평사.
- 윤형숙 (2002). 한국전쟁과 지역민의 대응: 전남의 한 동족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5권 2호, 3~29.
- 전쟁기념관 (1996). 『전쟁기념관 도록』.
- 전쟁기념사업회 (1997). 『전쟁기념관 건립사』.

- 전진성 (2005).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서울: 휴머니스트.
- 주은우 (2003). 『시각과 현대성』. 서울: 한나래.
- 진태하 (1993). ‘전쟁기념관’은 왜 개칭되어야 하나?. 『새국어교육』 vol.50. 1~4.
- 최석영 (2004). 『한국 박물관의 ‘근대적’ 유산』. 서울: 서경.
- 표인주 외 (2003). 『전쟁과 사람들: 아래로부터의 한국전쟁 연구』. 서울: 한울 아카데미.
- 富山一郎 (1995). 『戦場の記憶』. 임성모 역 (2002). 『전장의 기억』. 서울: 이산.
- 藤原歸一 (2001). 『戦争を記憶する: 廣島・ホロコストと現在』. 이숙중 역 (2003). 『전쟁을 기억한다: 히로시마·홀로코스트와 현재』. 서울: 일조각.
- Assmann, A. (1999). *Erinnerungsäume*. 변학수·백설자·채연숙 역 (2003). 『기억의 공간』. 대구: 경북대학교 출판부.
- Buruma, I. (1994). *Wages of guilt: Memories of war in Germany and Japan*. 정용환 역 (2002). 『아우슈비츠와 히로시마: 독일인과 일본인의 전쟁 기억』. 서울: 한겨레 신문사.
- Halbwachs, M. (1992). *On collective memor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www.warmemo.co.kr
www.awm.gov.au
- “타당성 재검토를” 여론 확산 논란 많은 용산 전쟁기념관 (1993. 6. 7). 『한국일보』. 5.
- 횡설수설 (1993. 6. 8). 『동아일보』. 1.
- 대역사와 공론 듣기 (1993. 6. 9). 『한국일보』. 3.
- 만물상 (1993. 6. 11). 『조선일보』. 1.
- ‘전쟁기념관’ 명칭 불합리 (2003. 6. 2). 『문화일보』. 7.
- 전쟁기념관 명칭 바꾸자 (2003. 6. 25). 『한겨레신문』. 4.

(최초 투고 2007. 8. 31, 최종 원고 제출 2007. 11. 5)

The Official Memory of Korean War and the War Memorial

Hyung-Gon Kim

Associate Professor

Dept. of Mass Communication, Tongmyong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d the official memory of Korean War through the War Memorial. The object of this study was the War Memorial in Yong-san, Seoul.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olitics of how the War Memorial would appear and the official memory of what the War Memorial would communicate. In the process of foundation of the War Memorial one-sided decision was made by the President and the Army. The aim of the War Memorial is to educate next generation. Anti-communism is the most important ground for value judgement of exhibition. In this sense, the War Memorial concretize particular interpretations on Korean War. This is the official memory of Korean War made by the War Memorial.

Key words: Korean War, War Memorial, official memory, collective memory